국회 추경심사 재개…상임위 안보현안 공방

민주 "늦어진 만큼 원안대로"
한국 "빚내서 하는 부실추경"
외통위 장관들 출석 현안질의

7월 임시국회가 30일 마침내 문을 열고 97일째 장기 계류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재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오후 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 증액 심사에 착수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추경 심사 전면 중단 선언 이후 일주일 넘게 심사 활동을 일절 진행하지 못해왔다. 현재 추경안에 대해선 1차 감액 심사가 마무리된 상태로, 증액 심사를 종료한 뒤 보류 사업에 대한 감액 재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추경 처리가 늦어진 만큼 조속히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을 포함, 일본 수출규제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빚을 내서 하는 부실 추경'이라며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안보현안질의도 이어진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출석한 채 열린 이날 오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러시아 전투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 현안을 놓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는 31일에도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를 각각 열어 안보 관련 현안 질의를 이어간다. 운영위의 경우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안보 실정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보수야당이 총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국방위에서는 한국당이 한 발 물러서며 사실상 폐기되기는 했지만 이미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정경두 국방장관의 거취 문제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도 안보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tbs 라디오에서 "최근 우리 영공에서의 중국과 러시아 비행기 진입과 침입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굉장히 잘 대처하지 않았느냐"며 "군사·국방 안보 문제들도 굉장히 잘했다는 평가를 국민들께서 하실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부가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을 사실상 유야무야하더니 또다시 발견된 목선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며 "무단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는 목선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다시 송환하는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했던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해 "정부가 러시아 영공 침범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 최근 안보 현안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살피고, 개각 상황을 지켜보며 도저히 봐주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재원 예결위원장(가운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소속 지상욱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간사, 자유한국당 이종배 간사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에 앞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휴양지 '저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

문 대통령 국민 100명과 탐방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휴양지로 이용돼 온 경남 거제시 저도를 이르면 오는 9월에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30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저도를 방문해 17개 시도에서 온 국민 100여명과 저도를 탐방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저도를 국민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 어민의 생업권과 생활편의를 도모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저도를 국민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2017년의 약속을 지키게 돼 기쁘다"고 말하고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저도는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라며 "저도 일대 바다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옥포해전이 있었던 곳"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에도 전남도청을 방문해 "전남의 주민들은 이순신 장군과 함께 불과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변광용 거제시장 등 행사에 참석한 지역 관계자에게 저도 개방이 거제시 지역경제와 관광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저도는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로 지정돼 대통령의 휴가지로 이용되다가 1993년에 거제시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해찬 "총선 인재영입 직접 나서겠다"

"비례대표 공개 오디션 공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재영입은 제가 직접 나서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인재영입위원회는 9월쯤부터 시작하려 한다. 외교·안보, 소수약자를 보호하는 장애인, 환경과 경제 등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영입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재영입을 한다는 것은 그 분이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뒷받침해준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이라 전략지역으로 단수 공천을 할 수도 있고, 비례대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인재 역량, 특성 등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를 잘해서 배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 당세가 좀 약한 지역들이 있다"며 "하반기에 좀 더 전략적인 판단을 해 사람들을 영입하고 출마도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비례대표 공천 방안과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분야별로 공개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면 소수 약자가 진출할 제도를 만들 수 있다"며 "비례대표 역할은 소수자와 전문가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게 주목적이라 대중적 인기, 지명도만 가지고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공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개인 편향에 따라 공천이 좌우되지 않도록 공천룰을 일찍 확정했다"며 "공천룰에 따라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끝장토론… 평화당 내홍 봉합될까

주내 맥주회동 합의점 모색
비당권파 '대안정치' 토론회
바른당 박주선 의원 축사

제3지대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민주평화당 내분이 가속화되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는 조만간 '호프타임'을 통해 당의 진로를 두고 다시 한번 끝장토론에 나설 방침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내홍을 봉합하는 것은 난망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비당권파 의원들의 신당창당 추진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는 30일 오후 국회에서 출범 기념 토론회 '한국 정치 재구성의 방향과 과제'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소속인 박주선 의원이 자리해 축사를 하고, 같은 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서면 축사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대안정치가 옛 국민의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미래당 내 호남계 인사들의 합류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양당 호남 의원들이 '제3지대 빅텐트론'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으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은 이르면 내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모두 참여하는 맥주회동을 열어 합의점 모색에 나선다. 이는 전날 당 고문단이 비당권파와 오찬회동을 하면서 "정 대표를 포함해 다함께 가는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측은 지난 15일 심야 끝장토론에서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했고, 각자의 입장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갈등이 봉합될 지는 미지수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권리당원 광주 4만·전남 6만명 넘을 듯

오늘 마감 막바지 모집 치열
총선 경선 레이스 핵심 변수
원서 쇄도 전산등록 인력 추가

광주·전남지역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집이 31일 마감되면서 막판 권리당원 모집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권리당원 모집이 당내 경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면서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지역의 민주당 권리당원 수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기록한 4만5000여명을 돌파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또 전남지역 민주당 권리당원도 최대 6만명 가량이 입당 서류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내년 총선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30일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31일 권리당원 마감시한을 앞두고 입당원서가 밀려들고 있어 추가 인력을 배치해 전산등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당의 경우 4만여명이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31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현재 13명의 인력을 투입해 권리당원 전산등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전산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 15일께 구체적인 권리당원 규모가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당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기록했던 권리당원 4만5000여명에 근접하는 '총선 권리당원'이 모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당도 지난 29일 현재 3만명이 입당 작업을 마쳤고, 30~31일 접수된 서류와 미 전산 등록분을 합치면 권리당원 규모는 최대 6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치르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당원으로 가입하고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한 사람만 경선에서 투표권을 가진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양향자 인재개발원장 사임…민주 日대책특위 합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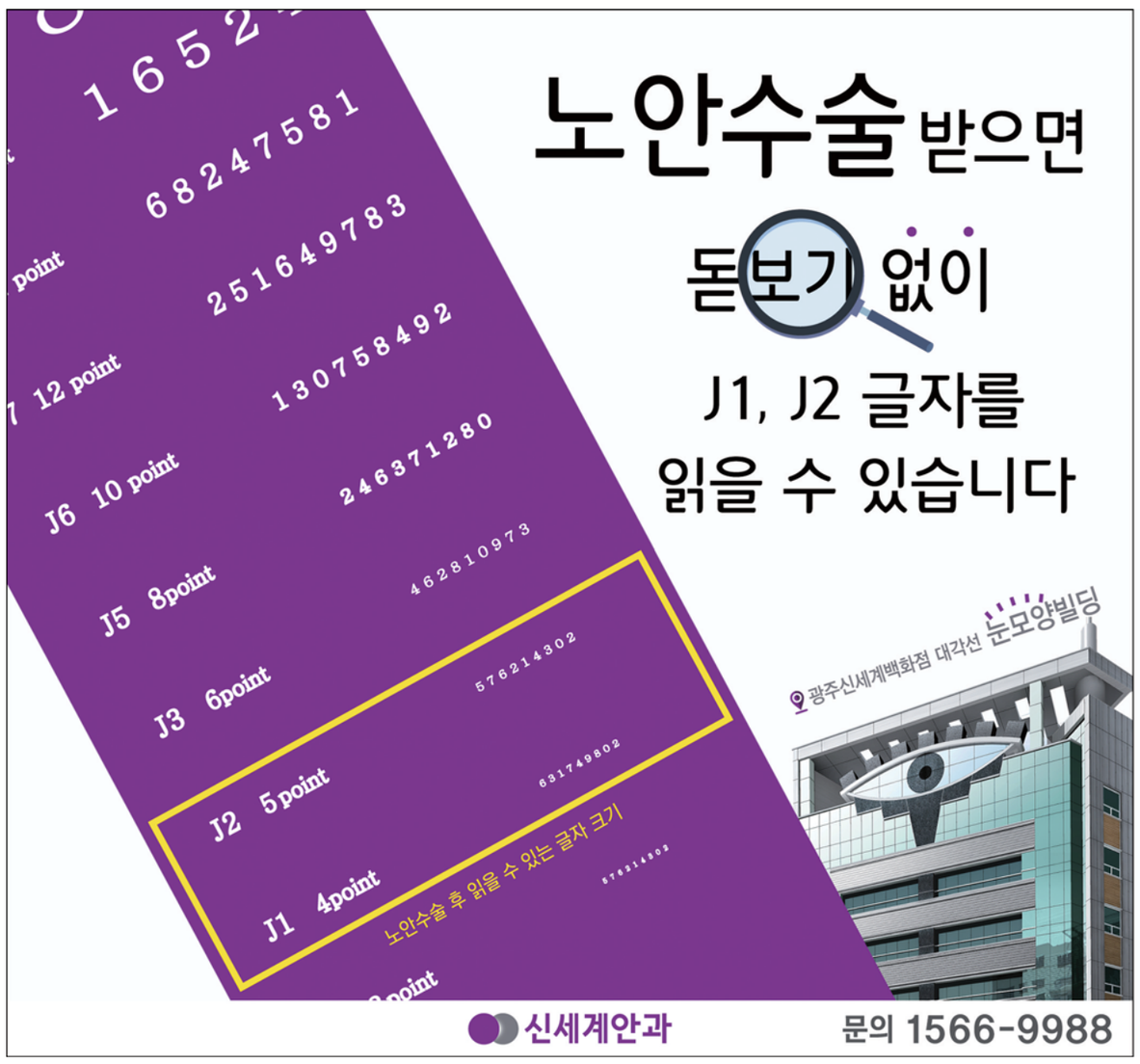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사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한다.

30일 민주당 한 관계자는 "양 원장이 특위에 합류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전문가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을 논의하는 데 산업적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향자 원장도 "특위 합류를 위해 인재개발원장직은 사임할 예정이며 당의 요구가 있었고 반도체 관련 경험을 살려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원장은 내달 1일 특위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전자 첫 고졸 출신 상무 이력으로 잘 알려진 양 원장은 2016년 민주당에 영입된 뒤 같은 해 총선에서 고배를 마신 뒤 당 여성 최고위원 등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임명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